

SciON Survey Report

학술지 검열(?)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수렴



학술지 검열(?)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수렴

문서 편집일 : 2012년 1월 12일

설문 기획자 : 이강수, 박지민

자료분석 및 보고서 작성 : 박지민

총분량 : 28 페이지

<설문환경>

- 설문대상자: BRIC 회원
- 설문주최/시행: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 문항 수: 8문항
- 설문기간: 2011년 12월 30일~2012년 1월 6일까지
- 총참여자 : 총 592명
- 분석방법 : 빈도분석, 교차분석
-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제로 한다.
 - 결과값 중 %값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문 의




SciON, <http://www.sci-on.net/> 전화: 054-279-8198 팩스: 054-279-5540 E-mail: scion@sci-on.net

- 목 차 -




I. 전체 결과 (총 592 명).....	4
II. 교차분석 결과	6
III. 기타 응답 및 주관식 결과	12
IV. 설문지	26

I. 전체 결과 (총 592 명)





Q 1. 미국 생물안보 국가과학자문위원회(NSABB)의 요청이 학술지에 대한 검열이라 생각하십니까?

1) 검열이라 생각한다	313 명		(53%)
2) 검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169 명		(29%)
3) 판단하기 어렵다	110 명		(19%)



Q 2. 미국 생물안보 국가과학자문위원회(NSABB)의 조치가 적절한 요청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적절한 조치였다	215 명		(36%)
2) 적절하지 않은 조치였다	239 명		(40%)
3) 판단하기 어렵다	138 명		(23%)






Q 3. 연구내용이 악용될 사태를 우려해 학술지 내용을 제재 조치(출판금지, 내용 수정/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절대 반대한다	126 명		(21%)
2) 매우 제한적이고 신중히 적용된다는 조건하에 찬성한다	399 명		(67%)
3) 악용될 우려가 존재한다면 제재조치는 언제라도 필요하다	54 명		(9%)
4) 판단하기 어렵다	13 명		(2%)

Q 4. 본인의 연구내용이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논문 내용의 제재조치(출판금지, 내용 수정/삭제)를 받는다면 수용하시겠습니까?

1) 수용한다	291 명		(49%)
2) 수용하기 어렵다	301 명		(51%)

Q 5. 만약 학술지 내용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누구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1) 과학계 스스로 주도 (학술지 편집위원 포함)	300 명		(51%)
2) 관련 정부기관 주도	12 명		(2%)
3) 시민단체 주도	2 명		(0%)
4) 과학계+정부기관+시민단체로 구성된 새로운 기관 주도	246 명		(42%)
5) 기타	32 명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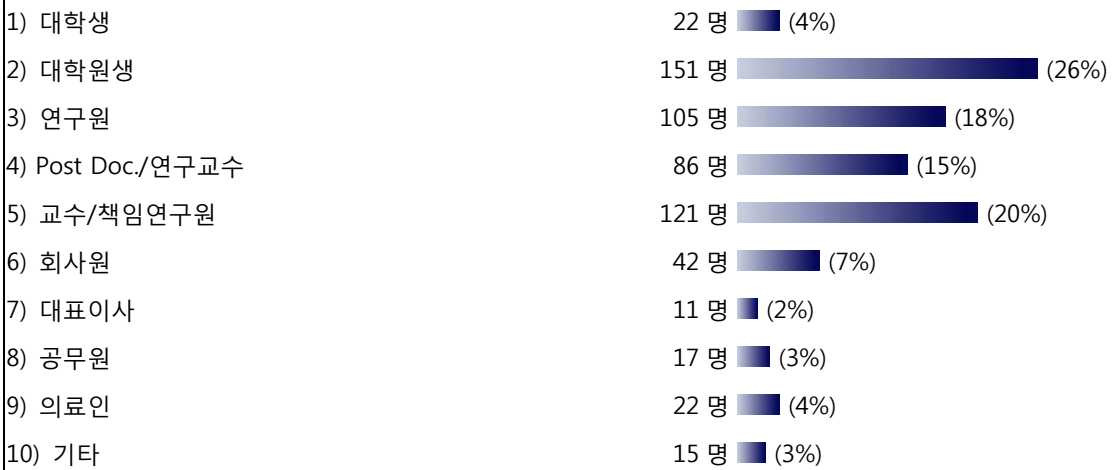
Q 6. 이번 논란의 적절성을 떠나 학술지 내용의 제재(혹은 검열)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92 분 응답

Q 7. 귀하의 학력은?



Q 8. 귀하의 직책은?



II. 교차분석 결과

Q1. 미국 생물안보 국가과학자문위원회(NSABB)의 요청이 학술지에 대한 검열이라 생각하십니까?

- 검열이라 생각한다
- 검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판단하기 어렵다

단위 : 명, %

	검열이라 생각한다		검열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전체(A)	
전 체	313	53%	169	29%	110	19%	592	100%
학 력 별								
학사	35	49%	21	30%	15	21%	71	12%
석사	119	53%	62	28%	42	19%	223	38%
박사	156	53%	85	29%	52	18%	293	49%
기타	3	60%	1	20%	1	20%	5	1%
직 책 별								
대학생	11	50%	4	18%	7	32%	22	4%
대학원생	77	51%	44	29%	30	20%	151	26%
연구원	61	58%	26	25%	18	17%	105	18%
Post Doc/연구	42	49%	25	29%	19	22%	86	15%
교수/책임연구	69	57%	32	26%	20	17%	121	20%
회사원	22	52%	13	31%	7	17%	42	7%
대표이사	4	36%	3	27%	4	36%	11	2%
공무원	7	41%	8	47%	2	12%	17	3%
의료인	9	41%	11	50%	2	9%	22	4%
기타	11	73%	3	20%	1	7%	15	3%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Q2. 미국 생물안보 국가과학자문위원회(NSABB)의 조치가 적절한 요청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적절한 조치였다
- 적절하지 않은 조치였다
- 판단하기 어렵다

단위 : 명, %

	적절한 조치였다		적절하지 않은		판단하기 어렵다		전체(A)	
전 체	215	36%	239	40%	138	23%	592	100%
학 력 별								
학사	24	34%	31	44%	16	23%	71	12%
석사	78	35%	86	39%	59	26%	223	38%
박사	111	38%	120	41%	62	21%	293	49%
기타	2	40%	2	40%	1	20%	5	1%
직 책 별								
대학생	6	27%	10	45%	6	27%	22	4%
대학원생	47	31%	61	40%	43	28%	151	26%
연구원	35	33%	45	43%	25	24%	105	18%
Post Doc/연구	34	40%	36	42%	16	19%	86	15%
교수/책임연구	49	40%	46	38%	26	21%	121	20%
회사원	12	29%	19	45%	11	26%	42	7%
대표이사	5	45%	4	36%	2	18%	11	2%
공무원	9	53%	5	29%	3	18%	17	3%
의료인	13	59%	5	23%	4	18%	22	4%
기타	5	33%	8	53%	2	13%	15	3%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Q3. 연구내용이 악용될 사태를 우려해 학술지 내용을 제재 조치(출판금지, 내용 수정/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절대 반대한다
- 매우 제한적이고 신중히 적용된다는 조건하에 찬성한다
- 악용될 우려가 존재한다면 제재조치는 언제라도 필요하다
- 판단하기 어렵다

단위 : 명, %

	절대 반대한다		매우 제한적이고		악용될 우려가		판단하기 어렵다		전체(A)	
전 체	126	21%	399	67%	54	9%	13	2%	592	100%
학 력 별										
학사	15	21%	47	66%	8	11%	1	1%	71	12%
석사	42	19%	153	69%	20	9%	8	4%	223	38%
박사	69	24%	195	67%	25	9%	4	1%	293	49%
기타	0	0%	4	80%	1	20%	0	0%	5	1%
직 책 별										
대학생	5	23%	15	68%	2	9%	0	0%	22	4%
대학원생	28	19%	106	70%	11	7%	6	4%	151	26%
연구원	24	23%	69	66%	10	10%	2	2%	105	18%
Post Doc/연구	20	23%	57	66%	9	10%	0	0%	86	15%
교수/책임연구	27	22%	79	65%	11	9%	4	3%	121	20%
회사원	8	19%	28	67%	6	14%	0	0%	42	7%
대표이사	2	18%	8	73%	1	9%	0	0%	11	2%
공무원	2	12%	12	71%	3	18%	0	0%	17	3%
의료인	5	23%	17	77%	0	0%	0	0%	22	4%
기타	5	33%	8	53%	1	7%	1	7%	15	3%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Q4. 본인의 연구내용이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논문 내용의 제재조치(출판금지, 내용 수정/삭제)를 받는다면 수용하시겠습니까?

- 수용한다
- 수용하기 어렵다

단위 : 명, %

	수용한다		수용하기 어렵다		전체(A)	
전 체	291	49%	301	51%	592	100%
학 력 별						
학사	34	48%	37	52%	71	12%
석사	105	47%	118	53%	223	38%
박사	151	52%	142	48%	293	49%
기타	1	20%	4	80%	5	1%
직 책 별						
대학생	6	27%	16	73%	22	4%
대학원생	68	45%	83	55%	151	26%
연구원	51	49%	54	51%	105	18%
Post Doc/연구	46	53%	40	47%	86	15%
교수/책임연구	63	52%	58	48%	121	20%
회사원	19	45%	23	55%	42	7%
대표이사	6	55%	5	45%	11	2%
공무원	12	71%	5	29%	17	3%
의료인	15	68%	7	32%	22	4%
기타	5	33%	10	67%	15	3%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Q5. 만약 학술지 내용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누구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과학계 스스로 주도 (학술지 편집위원 포함)
- 관련 정부기관 주도
- 시민단체 주도
- 과학계+정부기관+시민단체로 구성된 새로운 기관 주도
- 기타

단위 : 명, %

	과학계 스스로		관련 정부기관		시민단체 주도		과학계+정부		기타		전체(A)	
전 체	300	51%	12	2%	2	0%	246	42%	32	5%	592	100%
학 력 별												
학사	39	55%	0	0%	0	0%	29	41%	3	4%	71	12%
석사	108	48%	7	3%	1	0%	102	46%	5	2%	223	38%
박사	153	52%	5	2%	0	0%	112	38%	23	8%	293	49%
기타	0	0%	0	0%	1	20%	3	60%	1	20%	5	1%
직 책 별												
대학생	12	55%	0	0%	0	0%	10	45%	0	0%	22	4%
대학원생	76	50%	5	3%	1	1%	64	42%	5	3%	151	26%
연구원	48	46%	2	2%	0	0%	53	50%	2	2%	105	18%
Post Doc/연구	51	59%	1	1%	0	0%	29	34%	5	6%	86	15%
교수/책임연구	60	50%	2	2%	0	0%	44	36%	15	12%	121	20%
회사원	25	60%	0	0%	0	0%	16	38%	1	2%	42	7%
대표이사	4	36%	0	0%	0	0%	6	55%	1	9%	11	2%
공무원	7	41%	1	6%	0	0%	9	53%	0	0%	17	3%
의료인	11	50%	1	5%	0	0%	8	36%	2	9%	22	4%
기타	6	40%	0	0%	1	7%	7	47%	1	7%	15	3%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기타응답

- 본인 스스로 판단
- 연구자 스스로 약용될 소지가 있다면 연구하지 말아야 한다.
- 학술내용에 대한 제재는 불가하다
- 과학계와 정부 단체
- 저자
- 과학계+관련 정부기관
- 과학계밖에서 조치요구가 있을때 과학계가 주도하여 판단
- 과학계가 주도하되 이것이 권력으로 발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 과학계 + 관련 정부기관 주도
- 과학계+정부기관
- 과학계+정부기관+국제조정기구
- 주도할 만한 권위와 도덕성을 가진 집단이 없음
- 연구윤리위원회
- 제재 조치를 목적으로 어떤 기구나 모임이 생기는 것은 반대한다

- 제재조치가 이루어지면 안된다.
- 정부기관과 관련학회지, 책임저자의 협력
-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 어떤 경우에서든 제재 조치는 바람직 하지 않다.
- 제재조치 자체가 말이 안된다.
- 과학계+정부기관
- 과학계+ 정부단체만 (시민단체는 오히려 일을 복잡하거나 시민단체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
- 검열받아서는 안됨
- 연구발표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 져야한다
- 과학계+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새로운 기관 주도
- 정부기관 + 윤리적으로 검증된 과학계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
- 만약이라는 조건도 필요없다. 무조건 반대한다.
- 과학계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된 연구자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함
- 이 문항은 왜 있는지 모르겠음.
- 시민단체 빼고
- 어느 누가 주도한다하더라도 절대 있을 수 없다.

Ⅲ. 기타 응답 및 주관식 결과

[Q6. 이번 논란의 적절성을 떠나 학술지 내용의 제재(혹은 검열)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주관식 응답

- 1. 과학기술 발전 저해 2. 선진 기술의 독점화
- 1. 연구 방향에 대한 재고 2. 학술적 가치 보다 유행에 따른 연구
- 1. 연구자의 자기 검열로 인한 연구 위축 2. 연구에 대한 국가의 간섭 증대
- 가능한 우려사항 - 과학기술의 국제적 이기주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연구개발 국가에만 축적 - 과학기술의 부익부 빈익빈 - 과학계 내의 신뢰감 저하
- 강대국의 이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생명을 위한 것이라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강대국의 이익에 반하는 논문이나 국가 출신에 대한 차별 우려
- 개인의 연구를 여러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인류의 과학발전에 기여하고 개인의 연구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학술지의 출판목적일텐데 검열을 통해 중요한 사항이 빠진 연구내용을 누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이며, 학술지에 거론된 결과를 실을 수 있는 합법적 기반을 국가에서 만들어주는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 검열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연구 기피
- 검열 되어 제재 조치가 내려질만한 연구 분야를 연구하기 힘들 것 이다.
- 검열 범위의 과잉 확대 해석으로 인한 중요연구결과의 특정 국가로의 이해편중.
- 검열 여부를 두려워하여 연구 창의성의 단순화가 발생한다.
- 검열(?)에 반대하는 학자들의 반발.
- 검열강화로인한 자유로운 투고 제한
- 검열대상이될 것으로 판단되는 귀중한 연구의 진행자체를 제한하게됨.
- 검열로 인한 내용의 삭제는, 그 삭제를 위해 이미 '검열을 한 자'들에 의해 악용이 될수도 있는 사실이므로, 그러한 검열이 모두 확실한 가능성의 우려를 막아낼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검열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 검열을 악용하여 질 떨어진 논문 발표가 우려 됨
- 검열을 우려하여 논문 작성 내용을 미리 고려해야 하는 것.
- 검열을 이유로 한 과학계를 자우지 할려는 정부들이 생길 것 이다
- 검열의 기준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검열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검열 위원이 연구내용을 cheating하는 경우)
- 검열의 악용
- 검열의 악용
- 검열의 주체가 공정해야하고 항상 제3자참여하에 객관적인 이행을 해야한다.
- 검열의 확대로 인한 부작용
- 검열이 심해지면 과학계가 가지는 자율성, 창의성, 자율성 등에 침해가 올 수 있다. 아주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한번 검열이 사례가 될 수 있음.
- 검열이라는 것 자체가 악용될 소지가 많다. 그러한 제도들이 악용되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봐왔다.
- 검열자와 피검열자의 연구내용에 대한 이해 관계로 인한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점
- 게재 내용에 대한 검증여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것인지 궁금함. 게재자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것인지...
- 결과가 위험하여 발표를 못하면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데 필요한 연구를 회피하게 됨.
- 공개안되도록 지정될 내용들이 만약 인류를 위한 연구라면 그 내용이 비공개됨으로써 미래에 악영향을 주지않을까 염려됩니다.
- 공론화를 통한 검열? 로 인해 연구 억압 또는 호기심에 의한 해당 검열? 관련 재현성 으로 인재 발생 가능성
- 공익 및 인간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
- 공평무사한 기준과 절차가 없다가 당연히 악용될 소지가 있다.
- 과도한 검열. 과학적 자유로운 사상의 침해.
- 과도한 정부제제
- 과잉제제
- 과학 기술 발달의 퇴보
- 과학 논문 학술지는 서로 공유하고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진보된 연구를 하는 것이 목적인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이런 검열이 있음으로 똑같은 연구를 똑같은 실패를 다른 연구자가 경험해야하는 문제가 발생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과학 발달 저해
- 과학 연구 분야의 축소, 연구내용 악용 가능성을 과장해 특정 분야의 연구를 막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과학 연구는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논리에도 좌우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검열은 과학 연구의 위축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 과학계 정보의 공유가 어려워진다.
- 과학계에서 스스로 검열받을 수 있는 영역에대한 연구를 하지 않는 자기검열이 일어날 수 있다.
- 과학계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일은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논문 내용의 제재조치가 있다면 이는 내용 수정 및 일부 삭제의 개념에서 시작해야지 출판금지등의 일은 일어나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들이 논문등 결과에 의해 평가를 받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생각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과학계의 자율성 및 순수성 훼손
- 과학계의 자율성을 크게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과학계의 전체적인 발전속도가 늦춰질 것이라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테러리스트의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제재조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는데, 개별적인 질의를 할 경우 (메일 또는 전화 등) 테러리스트와 일반 연구자의 구분이 힘들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제재조치가 아무런 효용성이 없을 것이라 생각됨.
- 과학기술의 독점, 왜곡
- 과학기술의 편향성
- 과학발전의 필요한 지식공유로 인한 침체뿐만 아니라 단절된 커뮤니케이션등이 생겨날 듯 합니다.
- 과학순수성과 창조성을 통해 새로운 기술로 발전 변모 할 수 있는 기회를 막을 수 있다.
- 과학에 대한 연구가 이러한 제재 또는 검열을 통해서 순수성이 없어지게되고 이러한 제재에 순응해가면서 연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연구자체가 외부기관에서 정해진 틀에 의해 획일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과학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 과학은 정직과 신용을 기반으로 하며, 그 결과물은 반드시 공유되어야 한다. 학술지 내용의 제재는 과학계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고, 일부 특권층들만의 이익대변자로서 격하되어 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 과학의 발견이라는 부분에 대한 제재로 인해 동요를 일으키거나 위축될 수도 있으며 이를 계기로 간섭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든다.
- 과학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 과학의 사실내용에 대한 제한적 공유
- 과학의 순수성이 아닌 정치적인 논리에 과학이 악용이 될 수 있음. 정치세력의 언론장악의 새로운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짐
- 과학의 자유권 침해
- 과학의 잣대보다 정치적 잣대로 검열이 시작된다면 일부 분야의 과학 발전은 쇠퇴할 것이며 부정적 영향이 더욱 부각될 우려가 있다. 일례로, 만일 일부 바이러스의 독성이 강하다고 해서 바이러스의 연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그 바이러스로 비롯될 수 있는 재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는 행위라 생각한다. 우리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는 속담을 미국에도 전해주고 싶다.
- 과학의 진실성이 퇴색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 과학의 창의성과 자유의 훼손
- 과학의퇴보
- 과학이 가진 사상과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어야 하는 원칙에 위배되며 이로 인해 정보의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과학이 가진 사상과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어야 하는 원칙의 훼손
- 과학이 가진 사상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의 훼손은 물론 제재 혹은 검열 관계자의 의지에 따라 연구자의 연구영역과 인간의 알아야할 권리를 유린할 수 있다.
- 과학이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그런데.. 학술지 내용의 제재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함.
- 과학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연구단계서부터 고려하는 것은 연구의욕 저하 또는 연구 다양성을 축소한다고 생각한다.
- 과학이 정부기관의 관리 하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 과학이 정치적,경제적 논리등으로 왜곡될 수 있음. 아울러 국민차원에서 연구결과가 공유되지 못하여 국수주의로 흐를 수 있음.
- 과학이 지적 호기심의 충족,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진리에 대한 탐구와 발견이라는 순수한 목적을 표방하기에, 이미 과학은 전방위적으로 인류의 삶 깊숙히 스며들여와 있고, 과학 (과학기술)에 관련한 모든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쓰임이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대전제에 무관심해서는 안될 것이다. 앞으로 발견될 것이고, 연구될 무수한 과학적 탐구의 주제와 그 이기가 가져올 파급력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과학계는 물론이거니와 정부를 위시한 여러 기관 및 단체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올바른 과학기술의 쓰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

각한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러한 노력들이 과학이 갖는 순수한 목적을 침해하거나 맹목적인 규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위대한 과학적 발견이 옳지 않은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을 우려해, 그 연구와 발견 자체를 정부 차원에서 규제하고 훼손하려는 의도는 옳지 않다. 물론 정부 차원의 규제가 가장 손쉽고, 효율적일 수는 있을 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최선인가라는 물음에는 아주 회의적이다. 과학적 진실과 그 쓰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준하도록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정부를 위시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이로 부터 도출된 적절한 규제의 틀이 완성된다면 과학계도 충분히 수긍하고, 이것이 자양분이 되어, 대부분의 연구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가까운 방향으로 맞춰질 것이라 기대한다.

- 과학이란 '자유'라는 개념과 떼어놓고 사고할 수 없는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검열 또는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과학의 본질을 잃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과학자들이 순수하게 학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정부 기관과의 연관 등을 통해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소위 정치과학자의 길을 걷게 되는 과학자들도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 과학인으로써 연구 결과를 공유하지 못한다면 연구의 목적은 무엇이며, 결과적으로 정확한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가 없다는 말이 되네요.
- 과학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 대한 알권리 침해
- 과학자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으므로 자체적인 조정(?)은 가능하되 정부 등 외부단체의 간섭은 문제가 많다.
- 과학자들의 연구 의욕 위축
- 과학자들의 자유로운 연구활동 위축
- 과학자의 연구의욕을 감소시키면 순수한 의식의 외곡도 우려된다.
- 과학자의 자유로운 연구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 과학자의 자유로운 연구활동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으나, 연구결과가 초래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어느정도의 제재는 필요하다고 생각됨. 단, 그것을 과학계 스스로 주도해나가거나, 혹은 과학+정부+민간부분이 주도해 나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할 것임.
- 과학자의 창의성 결여 및 연구의지 박탈
- 과학적 결과의 정치적 사용
- 과학적 근거 없이 규제될 우려성
- 과학적 사고의 자율성을 구속하기 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 말살 또는 이윤추구 집단 및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방안 중재 또는 조정 합의를 위한 독립된 기관이 요구되며, 그 구성원은 다수의 순수 과학자여야 하며 자율적 의지로 동원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제재조치 기관의 결정권 보다 상위 개념임과 동시에 독립 기관으로써 작용해야 한다.
- 과학적 사실의 왜곡, 정보의 확장성, 공유성을 훼손
- 과학적 정보공유의 부족
- 과학적 정보의 공유가 힘들어 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과학적 주제판단에 대한 적절성
- 과학적 지식의 공유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과학의 발전에 해가 될 수도 있겠지요....
- 과학적 지식의 자유로운 소통 방해
- 과학전반의 탐구 활동의 위축
- 과학정보가 특정 집단 및 특정 국가에 독점될 수 있다.
- 관련 부분에대한 내용삭제로 다른학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중복적인 연구나 내용제기 등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부분은 낭비적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 관련 연구의 위축
- 관련 연구의 축소
- 국가 주도적으로 검열이 진행되면, 국가별로 많은 정보를 database하여 무기화 등등...해당 연구에 대한 정보가 악용될수 있을것 같다.
- 국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치적 혹은 사회, 문화적 견해에 반하는, 과학 결과에 대한 국가적 조정. 국가 주도하의 과학의 발전에 대한 객관성 소멸.
- 국가의 정책방향과 상이한 과학결과들에 대해 의도적 삭제 혹은 편집은 과학 학문발달의 혼란을 야기시킴.
- 권력 남용 및 과 방정책에 의한 제재
- 권력 혹은 직위 등의 남용으로 인해 초기의 목적과 다른, 예를들어 경쟁관계에 있는 연구자들의 학술지출간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 기득권자, 즉 해당분야의 선두그룹에서의 횡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 기사화로 인한 위험성이 더 높다고 생각됨
- 기술 정보 공유의 한계
- 기술 혹은 과학은 양날에 검이다. 좋은 과학자로부터 평화가 나쁜 과학자로부터 파괴가 나온다.
- 기술보안

- 기술의 공개를 통한 공유와 소통에 일부 국가 또는 단체의 이익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음
- 기술정보확산속도가느려짐으로 그사회패쇄성이증진되어 시장선두주자의자리에서 밀려나게된다...
-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에 배반되는 결과의 발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 기준의 오류
- 꼭 알아야 할 정보의 통제
- 남용
- 내용 제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악용의 우려라는 잣대를 들이대서 출판금지나 수정 삭제가 일어난다면 학술지의 내용이 편협해지거나 혹은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수 있다고생각된다. 또한 후속 연구자들이 정보공여에 대한 제약이 생겨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데도 많은 제약이 발생할 것 같다.
- 내용의 왜곡이 논문의 기본 기능에 저촉이 될 수 있음
- 내용의 제재로 인해서 실험의 내용의 재연성에 대한 의문사항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너무 강력한 보안 과 제재
- 논란의 소지가 있겠는가? 쓰레기 논문들 청산하기 위해 절대 찬성이다. 검열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 그래서 과학의 힘을 보여주자!
- 논문 인용의 제재로 인한 발전 도태
- 논문개제등의 위축 및 논문을 통해 새로운 지식습득이 어려워 질수도 있음. 또한 연구의 결과가 변질될수있음
- 논문에 대한 신뢰도
- 논문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 논문은 지식을 증명하는 곳이고 새로운 과학적인 업적을 검열받는 곳이다. 내용의 제재를 받는다면 제재를 하는 기관이 생기고 그 자체적으로 악용이된다면 국민들의 알권리 또한 줄어들 것이며, 논문이 실적으로 적용되는 과학분야는 실적도 줄어들게 될것이다. 학술지는 전문용어가 많다. 일반인들이 쉽게 생화학무기를 만들수없다. 과학자는 무기를 위해 생물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다.
- 논문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실험결과가 공유되지 못해 서로의 연구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논문조작의 가능성
- 다른 과학자들에 의한 검증작업이 어렵고,그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불충분한 정보로 인해 후발 연구가 어려워진다.
- 다른 모든 법체계와 마찬가지로 결국 인간이 만든 기준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 혹은 이와 유사한 판단으로 제재나 검열이 시작된다면, 이는 결국 과학기술과 과학적 사고 혹은 사상의 발전에 매우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또한 과학과 기술 혹은 정보를 권력으로 통제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 또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른 우려사항 또한 존재하겠지만 그것을 내세워 이러한 조치가 적절하지를 판단할 가치가 없다. 오로지 이러한 테러 예방 조치는 '겨울에 산불 사고가 많으니 모든 발화물질을 폐기 시키는 조치'나 다름이 없다.
- дай너 마이트가 사용될 방향에 대해선 어느 과학자도 알지 못했을것이다.
- 단순히 과학적 연구결과가 악용되는 것을 막는 것에서 벗어나 정치의 입김이 학술 논문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함.
- 단순히 연구내용이 악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아닌, 관련자들의 이해관계로 인한 제재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됨.
- 단순히 학술지 내용의 제재를 떠나 관련 연구에 대한 제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됨.
- 대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경우 소수의 견해(학설)가 지배적인 견해(학설) 혹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학술지 게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 데이터 신뢰성 저하
- 데이터 조작 순수 과학적 지식의 공유 침해
- 도덕적 결여에 의한 일부 대가 세력의 확대
- 도덕적이나 사회전반적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일부 특권층의 이익을 위하여 검열이 일어날 때
- 독립성 위배
- 동일계통연구자의 새로운 지식의 습득의 어려움
- 동일한 논리로 학자로서 당연히 해야하는 토론과 실험 자체를 제재받을 수 있다.
- 리뷰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 많은 논란이 야기될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 못할 것이라 생각됨
- 많은 논문은 다른논문을 인용, 참조하는 것인데 제재를 가하면 이 또한 제한이 올것입니다
- 매우 부적절한 처사임
-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과연 제재에 의해서 테러가 안 이루어질까 하는 의문점.
- 명확한 위험성 정도의 잣대없이 주관에 의해 제재를 남용하는것

- 부분별한 검열 또는 비논리적인 이익집단에 의한 과학발전의 저해가 우려됨.
- 무엇을 악용한다는 것인지?
- 무절제하고 부적절한 제재와 검열
- 무지한 학자와 교수들
- 문제시 되는 분야의 연구가 비공개적이 되면서 오히려 불법적인 방향으로 발전되거나 그 목적이 변질 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것으로 생각된다.
- 미국 정부의 주도하라는 것이 우선 걸립니다. 강대국이기때문에 현재 최고의 연구소나 실험실이 집중되어 있는데다가 학술지 또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인종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훌륭한 성과와 논문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재가 공식화된다면 과연 형평성있고 타당하게 제재를 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도 모호하고 법률 준비과정이란 제재절차도 무척 복잡할 것입니다. 테러를 막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테러는 굳이 과학적 성과를 막는다고 해서 바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미국 주도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과학 정책이 대두될까 걱정된다.
- 미국의 일방적인 정치 영향
- 미국이 정보를 독점적 관리할. 까우려됨
- 미정부에 의해 제재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학술지 내에서 또는 과학계 내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 반발
-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연구를 재대로 수행할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 보수적 제재 분위기이면 향후 진취적인 연구에 방해.
- 보편적인 정보제공에 있어서 타인의 의견이 개입된다는 것
- 본 사안을 학술지 검열 문제로 오도시키는 문항입니다. 생각의 자유를 말하는 인문사회 계열 학술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나 과학기술계의 경우를 똑 같은 잣대로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테러에 악용된다면 나를 포함한 인류 전체에 재앙이 되는 것이고 이는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본인의 연구가 제재를 당한다면 자유로운 연구활동이나 연구결과의 발표에 제한이 있을것으로 예상
- 비공개 논문의 필요성대두
- 비과학자들의 비논리적인 지나친 학술적 개입
- 비과학적 사고에 의한 자의적 요청과 여론의 부화뇌동
-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관련, 학문의 자유가 현저히 위축될 것입니다
- 사실 연구업적이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는 학술지 게재이다. 이런 연구자의 연구를 평가할 연구평가의 기준을 바꿀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안된다면 제재나 검열의 의미가 축소되리라 본다.
- 사실의 왜곡 및 발전 저해
- 사후 검열 방식은 애써 놓겨한 것이 무용지물로 될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가치판단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확대해석되고 남용되어 기득권이 학술부분 경쟁자에 대한 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사실 위험성은 확률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가 강해서 겪어보지 않고는 알수 없기때문이다.
- 삭제할 실험결과를 누가 그리고 어디까지를 판단하고 차 후 어떻게 실험결과를 확인 할 것 인지? 그 판단은 누가하는지?
- 새로운 논문에 대한 정보의 공유가 어려움
- 새로운 분야나 물질에 대한 연구 속도가 교류의 제한으로 조금 더더질 수도 있고, 알 권리가 다소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새로운 연구 발표에 대한 위축
- 새로운 연구로의 발전 저해
- 새로운 연구에 대한 위축
- 생명의 소중함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동물실험절차도 복잡해졌는데.. 그와 동일한 목적으로 논문을 검열한다면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적당함과 적절함을 잘 유지하는 것이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 생화학적 무기로 사용되는 것도 문제이긴 하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치료의 길을 막는 문제점도 있음. 그리고 해당 유행성 질환에 대한 상업적 제약회사들이 더욱 폭리를 취하거나 연구 목적이 아닌 돈을 버는 수단으로 연구를 진행한 후 일차적인 결과를 얻어 특허를 받아 유명회사에 넘겨 수익을 창출하는 비도덕적인 과학자들도 발생할 것이라 우려됨.
- 선진국들의 첨단과학관련연구의 기밀유지강화가 우려됩니다. NSABB는 권고를 하였고 관계학술지에서 논문에 대한 심사를 했다면 현재와 변함없지만, 학술편집위원회 스스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면 앞으로 첨단과학연구의 기밀유지가 더욱 심화되어 과학선진국가들의 기술전수가 점점 쉽지않으리라 생각되는군요..
- 선진국에 비해 연구인프라가 적은 도상국에 대한 국제정치적 악용
- 선택권 침해
- 소수의 의견(극히 지엽적이며 강대국, 다국적 기업 주도)에 의한 연구 결과의 통제 가능성

- 순수 과학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됨
- 순수 연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결국은 과학 발전이 국가 통제 수단으로 전락 될수도 있다는 견해다.
- 순수 연구자의 자유로운 정보 교환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연구의 자율성과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보다 사회적 질서 유지와 안전이 더 중요하다.
- 순수과학에 대한 정부기관의 간섭, 규제, 통제
- 순수과학의 연구에 제한을 받고, 제한을 받는 분야의 연구가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순수과학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음.
- 순수한 목적이 아닌 검열 자체가 악용이 된다면 어떠한 방법이든 안좋은 쪽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중립을 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 순수한 의도를 바탕으로 한 연구 내용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들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기관 자체 판단으로 과학 자체에 대한 순수성을 퇴색시켜 버리고 상하 관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 순수한 학술적 목적의 연구 위축 독성학이나 바이러스학 등 인류나. 생명체에 위협되는 존재에대한 연구를 통하여 그 위험성을 아는것도 필요한데 이들 연구의 위축
- 시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라면, 같은 맥락에서 어떤 학술 결과(대체로 인문사회)가 어떤 세력(기득권, 정부)에게 큰 해가 될 때 학술 결과를 검열 삭제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 실제 위험성 있는 테마에 대한 연구 포기
- 실험결과의 신뢰성
- 실험을 할 수 있는 항목에서의 제재가 심해 질 것 같고, 매우 제한적이 될 것 같다.
-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될것
- 아무래도 창의성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역발상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보다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악용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는것이 사실입니다.
- 악용
- 악용
- 악용
- 악용 사례.. 테러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위험이 존재하고 있어 기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악용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연구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접근하기 어렵다.
- 악용될 소지
- 악용될 여지도 있지만, 반대로 그로 인한 치료제의 개발 등의 연구에 지장이 생길듯.
- 악용에 대한 순수한 우려에 의한 제재가 아닌 정치적 압박에 의한 제재가 통용될 가능성.
- 악용을 가장한 과도한 제재로 말미암은 과학의 발전 저해.
- 악용을 방지한 제재조치
- 악용의 가능성
- 악용이 우려되지만 발표된 학술시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역시 제약을 받을 것이다
- 앞으로 검열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됨
- 앞으로 학술지에 기고되는 모든 내용을 제재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그 설 땅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어떠한 사실의 왜곡이 검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
- 어려움
- 어쩔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하더라도 학문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일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과학연구를 위한 미래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어차피 비밀은 없는 것
- 언제나 처음 취지는 좋은데, 나중에 가면 이걸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규정으로 제도를 정착해야 한다.
- 없다. 그리고 삭제된 내용이 정말 필요하다면 교신저자에게 personal communication 형태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없음. 과학은 논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논란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 연구 결과가 제대로 유통되지 못해 더 나은 연구가 나오기 전 단계의 연구를 다른 여러 곳에서 알지 못한 채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음. 이는 과학계의 발전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연구 결과의 신뢰성 저하
- 연구 결과의 확산에 장애
- 연구 결과의 활용은 각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칼로 사람을 죽일수 있다고 세상의 칼 제조를 금지 시킬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 연구 기회, 분야 축소

- 연구 내용 도용
- 연구 내용의 개방 축소
- 연구 내용의 독창성과 자율성의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연구 내용의 악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자체가 주관적이다 정부등 외부의 개입이 커질 수 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과학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가뜰이나 연구비 등으로 영향받기 쉬운 상황인데
- 연구 발전에 대한 추진력을 감소시키는 장애물 역할을 하게 될것이다.
-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이 일부 숨겨질 수 있을 때, 이를 역으로 이용하여 사실적 증거 및 신뢰도가 떨어지는 연구결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 연구 분야 다양성 제한 및 축소
- 연구 성과가 가려질 수 있다.
- 연구 위축
- 연구 위축
- 연구 주제에 대한 제한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연구 결과에 대한 공유와 타 연구와의 연계가 어렵다.
- 연구 주제의 위축 과학 지식의 공유 위축
- 연구 주제의 한정
- 연구 진행에 제한이 있을것이다
- 연구 폭의 제한. 연구란 모름지기 진리의 추구인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 사회에 악이 된다고 해서 연구 행위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연구하고자 하는 범위가 자의든 타의든 축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연구 활동 저하
- 연구가 개방되지 않아 지식 전달이 늦어져 연구 진행에 어려움이 생길 거 같다.
-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부당한 대우
- 연구개발의 위축
- 연구결과 발표가 지연될 수 있다.
- 연구결과에 대한 불신과 오용의 우려 내포
- 연구결과에 대한 의혹제기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 연구결과 악용 가능성 때문에 연구의 범위가 축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검열의 결과로서 비공개 연구가 증가할 것이고 이는 과학의 발전이나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고 사사로인 이익이나 비윤리적 목적을 위한 연구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나쁜 연구의 결과를 통해 도출된 나쁜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될 것이 우려됩니다.
- 연구결과 악용 및 복제 가능성
- 연구결과 왜곡과 특정 집단의 정보독식 문제 발생가능
- 연구내용을 정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학문적 의의가 흐려질 수 있을 것임.
- 연구내용의 옳고 그름의 판단.
- 연구란 모두의 협업일 수 밖에 없는데 연구의 발전이 저해될까 우려됩니다.
- 연구발전의 장애, 의사표현 억제
- 연구범위의 제한, 자율성의 제한
- 연구사실 활용도 저하
- 연구에 대한 내용이 자유롭게 유통되지 아니하고 제한적이라면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
- 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감소 및 연구 범위 혹은 주제가 축소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분적 제한을 받고 출간된 학술지 내용을 접하는 독자나 연구자들의 전반적인 연구의 내용과 결과의 이해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질병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연구가 고병원성 바이러스 혹은 동위원소와 같은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어서 어떤 가설에 대한 검증에 필요한 실험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정 전체를 오픈해서 실험의 디자인을 비롯 과정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 연구에 대한 제한이 있을수 있으며, 여러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할수 있는 공익적 목적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검열이 일부 집단의 이익을 위해 발생한다면 단연코 반대입니다.
- 연구에 대한 창의성이 약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함
- 연구원들의 논문을 적는 사람들의 자존심의 침해이다.
- 연구의 근본까지도 침해를 하게 되어 좋은 결과를 얻기에 제한 사항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 연구의 다양성 제한
- 연구의 다양성 축소
- 연구의 다양성이 제한 받을 것이다
- 연구의 독창성이 침해되고, 진실이 은폐될 가능성이 있음.
- 연구의 순수성이 떨어질 가능성 및 결과의 왜곡가능성이 우려됨
- 연구의 위축
- 연구의 위축

- 연구의 위축
- 연구의 위축, 창의력 저해
- 연구의 위축으로 인한 창의성 결여
- 연구의 자유
- 연구의 자유 침해
- 연구의 자율성 침해
- 연구의 자율성 훼손
- 연구의 자율성과 공개성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이자 권리 손실
- 연구의 자율성이 떨어짐.
- 연구의 제한 또는 독창성의 문제등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
- 연구의 조작등의 허위 연구 성과를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연구의 창의성이 위협받을수 있겠지만 세계적으로 인류에게 위협이 될수 있는 사항이 유출되는 위험성에 비한다면 그런 점은 감수해야할것이다.
- 연구의 최종 목표는 인간의 삶이 보다 향상되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테러리스트가 과학적 사실들을 이용하여 인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리스트가 인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과학적인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환경적 물리적 요소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접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나쁜 것이지 연구자체가 문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학적 연구로 탄생되는 인류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제외하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 연구의욕 저하
- 연구의욕을 감소시킬수 있다. 연구결과가 잘 활용되고, 과학계가 모두 공유함으로써 얻을수 있는 가치가 감소될수 있어, 장기적으로 보면 과학발전에 누가 될수도 있다.
- 연구인들이 스스로 연구한 결과물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문을 검열하는것은 의미가 없다. 논문 안쓰고 결과만 만들어서 퍼뜨리는 꼴을 만들고싶은가?
- 연구자 본인은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연구를 하다가 발견한것 혹은 얻은 그 결과를 학계에 내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만이 혹은 그 주위의 사람들만이 알고있는것 이것은 안좋다고 봅니다. 또한 미국드라마를 너무 봤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만약 어떤 연구자가 조사하던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테러리스트들의 귀에 들어가 만약에 그 사람이 납치라도 당해서 생물학적 무기를 만든다면.. 하물며 학술지에도 안나와있는 그 내용을 어느누가 그 연구내용을 알아서 대응책을 마련할까 싶네요.
- 연구자 의욕저하 및 기술발달을 주도하는 연구자가 부재시 기술이 사라질수 있다.
- 연구자가 논문의 게재조치를 고민하고 고려한다면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하지 못할 뿐더러 여러 가지로 제한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 연구자가 학술지 내용을 제재를 당할 수 있는 연구를 하지 않음.
- 연구자간의 정보교류가 단절될수있고,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가 어느정도 지연된다고봅니다. 만일 일부 특권층만 정보를 알수있다면 더 문제일수도 있구요
- 연구자들의 업적이 축소되고 정보 공유의 미흡함으로 연구 중복 현상이 증가할것로 예상됨
- 연구자의 권리 제한
- 연구자의 무한히 자유로운 생각의 나라에 의한 연구방향이 이러한 검열등의 문제 때문에 막힐 수 있다. 제한적인 연구는 연구에 독이라고 생각한다.
- 연구자의 순수한 의도가 사라짐과 동시에 사실이 훼손될 우려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연구자의 연구정보가 제한될 수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 조치가 있으면 필요하다고 본다.
- 연구자의 자유로운 연구주권 침해
- 연구자의 자율적 사고 무시
- 연구자의 출판 불가로 인한 피해 발생.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함. 연구비 지원 등.
- 연구정보 접근의 차단으로 인한 후속연구의 제한이 가장 우려됨
- 연구주제 선택에 제한 연구자의 발표 기회 제한 보안을 이유로 악용될 소지
- 연구주제가 제한적이 될 가능성이 크고, 또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연구에 임하기 어렵다
- 연구중인 내용이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의 기준 다수의 연구들이 악용될 수도 있는 양면성을 지닐 수 있음 이번 논란으로 인해 다양한 연구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음 그 때마다 검열하여 제재할 경우 그 기준은 무엇이며, 또 기준을 제시하고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됨
- 연구활동의 위축, 연구의지나 연구활동방향등 모든 연구활동에서 관의 눈치를 보게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자유로운 연구, 양심적으로 연구활동하는 학자들의 인격살인이다.
- 연구활동의 위축. 연구결과의 국가중속화, 학술지 제제를 통한 연구원들의 탄압.
- 연구활동의 제약

- 연구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아주 중요한 연구 임에도 불구하고 학술지 내용에 제제가 가해진다면, 연구활동의 동기부여에 영향을 줄 것 같다.
- 열심히 연구한 결과를 알리지 못하기에 세상에 도움이 될수도 있는 연구결과를 알리지 못할수도 있다
- 오판에 의한 학문 발전 저해
- 오히려 해당분야 연구에 좋지 않은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
- 왜곡
- 외부 기관에 의한 정치적 혹은 다른 이타적 권력개입 가능성이 존재
- 외부 단체 및 개인에 의한 작위적 제재(검열)
-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어떠한 연구의 결과가 어떻게 악용될지 알 수 없는 만큼, 얼마나 긍정적이며 유용하게 사용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므로 연구 내용의 제재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한다.
-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 있다.
- 우선 과학발전이 상당히 저해될 수 있다. 일부 제재 내용의 기준이 미국정부에 의한 것이며 현실적으로 미국 정부의 제재 기준이라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뒤집어 해석하면 일부 연구 결과가 미국에만 공개될 수 있다. 즉 미국이 연구결과를 독점하여 악용할 소지가 매우 다양하다. 과학자만 조금 더 나가 생각하면 모든 과학자들을 미국이 관리감독하는 황당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과학은, 과학계 자체의 자정시스템에 의해 정화, 조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핵과 수소폭탄이 어떤 식으로 이용되었는지, 왜 무기화 되었는지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 우선 연구내용의 악용의 가능성이란 말자체가 객관적이거나 논리적인 근거를 대기가 어렵다고 본다. 연구의 목적과 다른 응용을 우려하는 것은 학술지가 지향하는 바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된다.
- 원래 목적에서 다른 목적으로의 변질
- 위험도 높은 약물이나 다른 바이러스로 실험한 논문의 제한으로 인해 새로운 발견에 대한 지식 공유 저하
- 위험한 연구라는게 존재하기보다는 연구를 악용하려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문제 인것같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학술지 내용을 검열을 시행한다면 연구성과, 연구업적, 연구과제에 위험도를 기준을 세운다는것인데 이는 결국 꽤 많은 부부문들이 제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유용한결과라도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삭제될수도 있음
- 유해성이 우려되는 생물학 연구분야에 대한 구분 및 제재 등이 발생되고, 학술지 내용 검토에 대한 권위 등에 대한 이슈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서 과학계 및 과학자의 사명과 윤리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복제 등에서 나타난 위험성 및 윤리도덕성 이슈가 사회 및 관계자와 대립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이에 대해 공존공생을 위함에 있어 치명적인 연구에 대한 내외적인 압력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반발이 우려된다. 학술지 내용의 제재 이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연구주체에 있어 과학자의 양심과 책임, 연구윤리위원회의 검토 등에 대해 강조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과학기술, 특허 등에 있어 국익 등을 위해 보안/비공개외의 구분이 있는 만큼 적절한 수행자 및 기관에서 해당 연구를 흡수 관리하는 등의 방안이 공개되고 원하는 과학자의 접근/신청/승인 등의 절차 마련으로 해결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 의도적 게재 거부
- 의도적인 수정 및 삭제가 일어날 수 있다.
- 의도치 않은 검열로 인해 학문의 진정성이 훼손될수 있다는 점?
- 의미있는 연구 결과의 출판 불가로 인한 공공의 이익 또는 정보 제한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함
- 이러한 것이 연구자들에게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수있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는 목적만 정당(?)하다면 과학자를 옳아매는 것도 허용될수있다는 것이된다. 하지만 과연 목적의 정당성을 누가 판단할수있는가? 이는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누구의 압박에도 (예를 들면 제약회사 등) 독립적이어야 할 과학자들에게 매우 위험스러운 것이다.
- 이러한 사태는 경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를 악용하여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때
- 이미 밝혀진 사실인데 연구를 계속 하는 문제
- 이번 논란과 같이 테러리스트의 악용 우려를 위해서라면, 인류의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나, 이런식으로 특수한 경우의 검열이 허용이 되기 시작하면 상대적 약소국의 기술적인 진보를 견제하는 측면에서 다른 어떠한 이유를 들면서라도 검열을 주장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히, 한정적인 이유에서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정부 기관의 지나친 검열 초래
- 이번연구도 그러한결과를 예상하고 한 실험이 아니고, 이런제제조치는 다양한연구동기부여의 위축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 이해관계자에 의한 인위적 간섭
-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과학은 그 자체로 과학이라 말할 수 없다.
- 인기 있는 내용에만 편중된 연구 우려
- 인류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 인류의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학문과 양심의 자유가 사상, 정치, 경제 또는 언론등에 의해 언제든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위

기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른것으로 이러한 조치는 학문의 위축은 물론 국수주의 및 거대권력층에게 악용될 가능성이 너무크다.

- 인류의 지식은 알아야 오용을 방지할 수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일이다.
- 일부 기관의 정보 독점
- 일부 선진 기술을 가진그룹에서 지식 선점을 위해 악용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일부 위험성을 가지는 내용들이 일반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내용의 제재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외국되어진다면 일반에게 공개되어도 무관하거나 이용가치가 있는 부분들까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히 적합한 기준이 세워져야 하며 이러한 기준에 맞춰 공개 및 비공개를 판단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때 적절할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 일부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방법을 know-how화 하여 지식권력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
- 자격없는 검증인(학술지 내용을 100%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 의해 부조리하게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는 경우.
- 자기 검열로 인한 위축
- 자기검열을 통한 지식 공유의 제한
- 자료 검색의 제한
- 자신의 주관
- 자유기회 박탈
- 자유로운 연구 결과 유통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활발한 연구의 확장이 일어나기 어렵고 특정한 연구실이나 국가에서만 계속 연구가 진행되어 연구 성과의 양극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제재기준을 세우는 것도 애매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학계에서 오히려 이 검열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
- 자유로운 연구 기술의 제한 및 과학기술의 활용이 제한 될 수 있다
- 자유로운 연구 정보 교환이 어려움
- 자유로운 연구 침해
- 자유로운 연구 활동의 제한과 정치 세력의 개입, 약소국의 연구활동 침해
- 자유로운 연구결과 공유가 어려워질수 있기때문에 과학발전에 제제가 가해진다
- 자유로운 연구를 방해한다고 생각
- 자유로운 연구를 제한할 수 있다
- 자유로운 연구의 방해
- 자유로운 연구의 제한성
- 자유로운 연구풍토의 저해
- 자유로운 정보 공유와 지식의 발전 저해
- 자유로운 정보공유로 인해 서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방향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 자유로운 정보의 공유에 문제가 생김.
- 자유로운 학문 활동의 제약
- 자유로워야 하는 학술적인 의견들의 부자연스러움.
- 자유롭게 개방적인 의견개진의 자가 검열화
- 자유롭지 못한 논문 서치와 연구교류의 제한
- 자유롭지 못한 학술지 서술과 내용의 변질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자유성과 학문적 카타르시스에 반한다.
- 자율적 연구의 침해성.
-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문의 자유 훼손
- 자칫 연구 진행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 잘못된 의도의 검열 악용의 소지가 있다
- 저의 짧은 식견으로는 좋은 정보를 공유하면서 연구발전에 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적대 국가 출신의 연구자의 논문 발표를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검열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음.
- 전문가로 이루어진 심의 및 제재라면 큰 우려사항은 없다.
- 전보다 다양하고 깊이있는 주제에대한 정보가 알려지지못할 가능성
- 점진적인 표현의 자유 제한.
- 정권에 입맛에 맞는 내용만 내보내게 되어서 결국 정치교수에 의한 정치논문만이 게재될지도 모른다.
- 정보 공개의 부재
- 정보 공유의 어려움
- 정보 독점 가능성 우려
- 정보 독점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집단이 제도를 악용할 위험성
- 정보가 다 공개되는 것이 아닌 얻을 수 있는 사람만 얻게되어 정보의 이용에 대한 제한적 차별이 생길꺼 같다

- 정보가 자유롭게 공유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연구발전의 제한
- 정보공개에의 제한
- 정보공유의 단절
- 정보독점 및 조작, 은폐의 가능성
- 정보를 자유롭게 얻는데에 약간의 불편감.
-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된다. 자칫 소수의 기득권에 의해 핵심 기술이나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으며, 그 기술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은 대처하지 못하거나 무지에 의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정보오류.. 과학의 선진국 종속.. 미국위주의 사고방식
- 정보의 독점
- 정보의 독점
- 정보의 부족현상
- 정보의 악용
- 정보의 은폐, 소통의 제한, 강자약식
- 정보의 제한
- 정보의 차단에 의한 과학발전의 걸림돌
- 정보의 통제
- 정보통제
- 정보폐쇄로 인한 과학 발달의 침체
- 정부 개인기업의 학지에대한 권력 남용
- 정부 또는 거대기관의 이익에 배치되는 연구활동들에 대한 제재
- 정부 및 관련단체에 불리한 내용의 학술지 내용이 정치적으로 검열되거나 제재될 우려가 있음
- -정부(미국이건 여타의 나라의 정부건...)의 입맛에 맞지 않는 연구팀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 -검열의 주체가 연구결과를 악용할 가능성.(맨하탄 프로젝트를 과학자들이 주도했던가?) -학술지의 심사위원 보다 검열 주체가 연구 결과 평가의 결정권을 쥐게될 가능성. -연구결과 교류의 제한. -학술적 평가보다 정치적 고려가 연구 평가의 주요항목으로 변질될 가능성. -학술지 내용을 테러에 이용할 정도의 학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조차 테러에 가담하는
- 정부가 외부에 요청한 연구결과에 대해 정부의 의도와 맞지 않을 경우 이번 사례를 악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부기관의 개입으로 인한 과학의 자율성 제한
- 정부나 산업의 임의적인 목적에따라 학술연구가 제한될 가능성 충분
- 정부나 특정 단체에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연구가 위축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정부에 의한 통제는 과학의 악용을 막기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에도 심각한 후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악용될시에 관련분야 전문가의 부족으로 큰 혼란을 가지고 올 것이다.
- 정부의 과학기술 악용
- 정부의 연구지원이 제한되는 부분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며, 연구방향 설정 및 중립성에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의 의도적 개입
- 정책결정에 민감한 내용에 대한 출판 통제.
- 정치논리에 과학이 휘둘릴 수 있다는 점
- 정치적 개입
- 정치적 논란에 휩싸임
- 정치적 목적 이용
- 정치적 목적에 이용
- 정치적 이권 개입에 의한 논문 게재의 편파 판정, 논문의 진실성에 대한 고찰
-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 정확한 과학계 소통이 어려워 질 수 있지 않을까.
- 정확한 기준 없이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어렵게 될 수 있다.
- 정확한 정보 전달이 어려워지며 과학 발전을 저해 할 것이다.
- 정확히 이해는 잘안가지만 몇년을 피땀흘려 연구한것을 기제못하고 인정못받고 제재 당하면 어디서 어떻게 이 보상을 받을지가 의문이고 제재 당하면 그만큼 연구를 못하게하는 느낌드는 이 기분은 뭐죠? 제재에 대한 포커스만 잡혀있지 그후에 방침은 하나도 없네요.
- 제 3의 권력 창출 또는 진실성 규명, 검증의 어려움 발생
- 제재 규정의 확대 해석, 과도한 검열과 그로 인해 관련 연구가 축소될 수 있다
- 제재 기준 설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 제재과정이 특정집단에 의해 독점될 것이며 그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변질될 것.

- 제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기관의 공신력
- 제재역시 악용 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
- 제재와 검열의 범위가 공익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기점으로 하여 슬금슬금 검열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에 따라 연구비 지원이 끊겨 필요한 연구가 못 이루어지는 것
- 제재의 남용
- 제재의 수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선결되어야 함.
- 제재제도의 악용과 학계 자정능력의 퇴화.
- 제재하게 될 경우, 제재된 학술내용과 연구자의 지식과 Know-How는 자칫 결코 막지 못할 재앙으로 인도할 수 있다. 철저하게 공개할수록 거기에 대한 악영향에 대한 해결이나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길이 활성화될 수 있다. 아직까지 비공개 과학지식이 대중에 유출되지 않은 적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산업적으로 보안사항으로만 관리되었을 뿐이다.
- 제재하는 분야는 도태되거나 발전가능성이 없어질 수 있음.
- 제제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학기술 혹은 원리적 기초의 발견의 제제는 그로부터 뺀어 나갈수 있는 수 많은 가치를 잘라 버리는 것과 같다. 가지치기는 건강한 나무를 키우기 위한 좋은 방법이지만 자라지도 않은 싹을 임의의 추측으로 미연에 잘라버린다면 그 가지에서 자라날 꽃과 열매를 얻기에 시간적 비용적으로 많은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 제제 혹은 검열로 인한 폐해보다는 제제를 하지 않아서 생길 피해가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제제로 인한 문제는 기껏해야 개인의 업적이 축소되거나 과학발전을 어느 정도 지연시킨다거나 하는 정도겠지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개인이나 사회, 국가가 법적으로 시간을 들인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제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범지구적인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고 과학자들의 윤리의식이 분명 도마위에 오를 것이며 과학의 존재가치가 의심받을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제를 하지 않는다면 제제를 했을 때보다도 과학자의 자유로운 연구가 더 제한받을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 제제된 정보로 인해 추가적인 과학적 발견이나 인류에 도움이 되는 응용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제한적인 정보 유통에 따른 과학 발달의 지연
- 제한적인 정보전달에 따른 이후 연구의 배경의 지식 부족
- 제한적인연구의 제재시 판단근거의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이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 생물에 대한 순수 학문 연구의지를 꺾을 수 있다.
- 좋은 내용의 논문이 사장됨 특정 기술만 관계당국의 협조요청에 따라 기재할 수 없음으로 표기되어 출판되는 것이 타당함
-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학술지 내용의 제재를 받게 된다면 과학자들의 연구 의지를 크게 꺾을 수 있다. 또한 과학기술이란 일종의 공공재인데, 연구 내용 및 정보의 독점적 통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으며, 관련 분야의 연구가 축소될 수 있다
- 중앙집권 권력의 통제로 인한 과학의 발전 저하 및 인류 공동이익의 감소
- 중요한 연구 데이터 임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지동설을 주장하던 갈릴레이 갈릴레오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겠는가
- 지식공유의 제한
- 지식에 대한 알 권리 어둠의 루트를 통한 잘못된 정보 유출
- 지식의 공유에 대한 권리침해, 과학기술의 독점행사로 이어질수 있음.
- 지식의 쓸림. 검열하는 권력 기관과 그 사회만의 지식 독점에 따른 피해가 분명히 있다. 원자 폭탄이 사례가 될 듯..
- 지적자료의 공유제한으로인한 과학적발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 지적재산권 강탈이 되어서는 안된다.
- 진리 추구의 자유 제한
- 진보된 과학적 지식의 전달을 막음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내용의 음성적 유통을 통해 오히려 괴담과 불안감이 증가할 것이다. 검열 자체가 하나의 제약이 되어 결과물의 발표를 억압함으로써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한다. 더 큰 문제는 연구결과가 국가 등의 권력에 의해 악용되는 것일 텐데...
- 진실만을 추구해야 하는 과학에서 테러의 악용이라는 미명아래 검열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 질경우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적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할수 있다. 생물학적 테러가 우려된다며 국가나 그에 상응하는 기관에서 연구 결과를 사전 조율하게되고 과학자간의 연구교류는 매우 제한적이 되므로 연구위축의 우려됨.
- 진실의 왜곡?! 발견의 활용의 제한...
- 진정한 학술 공유의 훼손
-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과학활동의 침해, 악용의 경우보다 큰 응용의 계기가 무산되는 아쉬움이 있음
-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를 저해함으로써 전반적인 과학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 생각됨.
-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정권에 의한 언론통제와 같은 상황처럼, 안보라는 미명하에 자행될 수 있는 특정 정권에 의한 연구 및 발표의 통제에 대한 선례가 됨.

- 최초 발견 또는 연구확립자의 변경
- 출판업자나 특정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공익사항 조차도 검열에 의해서 삭제될 수 있음.
-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학술지 게재를 제재 한다면, 영원히 조류독감은 정복하기 어려운 질병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연구를 활성화 해서 테러에 사용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만드는것이 옳은 방향인것 같습니다.
- 통계기구의 지나친 간섭 실험 데이터의 정치적 이용
- 퇴보
- 투명한 연구 결과 보고가 아닌 내용 수정에 대한 내용 조작의 위험이 우려됨.
- 특별한 결과에 대해서 전세계적인 공유가 어렵고 각국의 기술력의 차이에 따라 격차가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특정 국가 혹은 이익집단에 의한 지식의 독점이 생길수 있다고 생각됨
- 특정 국가가 개인을 희생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기술의 유출을 막는 것은 좋으나, 이번 같은 경우 오히려 제재를 한 국가가 독점적으로 그 기술을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 특정 분야 연구의 발전속도 저하. 특정 정보의 제한적 공유로 인한 학문의 독점화 가속.
- 특정 분야에 대한 내용의 제한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특정 집단의 제한같은 불공정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것이라 우려된다.
- 특정 세력(?)의 개입을 통한 불평등이 올 것 같습니다.
- 특정 연구과제의 기피 혹은 편중현상이 발생할 우려 있음.
- 특정 이해 관계에 의한 검열 가능성
- 특정 정보의 은폐로인한 어느 누구나 과학 정보를 습득할수있는 자유및 권리의 침해
- 특정기관에 의한 제재(혹은 검열)기준의 설정의 왜곡이 가능해져, 과학의 방향을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특정분야의 연구 발전 저해
- 특정연구의 시작은 일부 소수에서 비롯하지만,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과 나눔을 통해 발전하고 혁신되어 가는것이 과학의 특성일진데, 테러리스트와 같은 극단적인 악용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저해하는 것은 불합리 하지 않나요? 악용하려고 마음 먹는다면, 학술지 내용에서 삭제 되었다하더라도,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헤쳐 밝혀내겠조-
- 특정정부 및 개개인의 이익에 의해 순수 연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
- 특허권 혹은 지식소유권에 대한 부분. 확실한 Guide 없이는 분쟁의 소지가 다분해보임.
- 특허침해, 기술누출 등
-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제재는 연구 활동의 보고 및 발표를 위축 시킬 우려가 있다..
- 판단기준이 모호할 경우, 제재자(여기에서는 미국정부)의 검열이 될 수 있으므로 상세하게 명문화된 가이드라인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 표현의 자유를 막는 일은 연구에 대한 기대심과 능률을 떨어뜨릴 것이다.
- 표현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연구의 자유, 지식의 공유 등에 대한 부적절한 관여
- 표현의 자유침해
- 표현의 자율성 침해
- 필요한 연구자들의 제한적인 정보 획득
- 학계발전 저하 및 정부의 의도적인 검열
- 학문 연구 자유의 제한, 주제의 제한,
- 학문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제시가 힘들어 질듯.
- 학문의 도태
- 학문의 발전 저체
- 학문의 발전 저하, 창조성 침해
- 학문의 영역에 정치가 직접적으로 개입될 수 있다.
- 학문의 자유 침해
- 학문의 자유가 정치적인 잣대와 국가적인 이익에 의해 손상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 학문의 자유와 창의력 저해
- 학문의 자율성 저해
- 학문의 자율성 침해 그러므로 나타날 학문 발전의 저해
- 학문적 사실의 객관적 평가에 대한 기회상실로 과학적 진실 규명이라는 당위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
- 학술 내용에 대한 검열은 과학자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강력히 반대한다. 당장 자신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다고 좌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후에 본인들의 연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연구논문은 짧은 시간 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몇장을 새로운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수년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노력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새로운 정보들이 만들어 지는게 과학계의 지식인 만큼 학술지

내용 검열은 과학지식의 퇴보를 자행하게 되는 행위라고 여겨지며 과학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 학술 내용의 제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수가 없으므로 동일한 실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다고 생각됨
- 학술 연구 결과 출판 및 표현 자유의 제재
- 학술 연구에 대한 내용에 대해 일부 내용이 수정 혹은 삭제된다면, 연구자의 연구의욕 혹은 연구성과 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됨
- 학술 정보의 자유로운 발표 및 공유의 제한
- 학술내용이 자유롭게 활용되지 못함으로 인한 과학발전의 느린행보.
- 학술논문은 자기검열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연의 이치를 연구하는 가치 탐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학술연구결과를 부당하게 특정 기관, 국가 등에서 독점하거나 제한할 가능성
- 학술영역 제한
- 학술의 진정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음.
- 학술자유가 공공이익보호의 이유로 점차 침해될 것이 우려됩니다.
- 학술적 내용이 제한받게 될 것이다.
- 학술적 연구결과 및 연구활동이 비 학술적인이유로, 또한 학자들이아닌 객체에 의해 심각한 침해를 받을수 있다.
- 학술적발전도 우려가 되지만 연구자개인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제재를 당한 연구자는 자신이 몇년동안 연구한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 하기때문이다. 때문에 이데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한다.
- 학술적인 논문 자체로서의 의미 상실
- 학술지 검열(?)에 의해 정확한 내용 보고되지 않음으로 연구 중복 진행 가능 검열 대상이 된 연구에 대해 연구 기피 현상 발생 결과적으로 연구 진행 퇴보 그 분야 기술 발전의 퇴보 가져올 수 있음
- 학술지 내용 자체에 제 3의 기관, 단체가 개입한다면 그 학술지의 온전한 학문적 이익 추구가 변질 될 것 같습니다.
- 학술지 내용의 제재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짐으로 인해 오히려 해당 연구자들이 범죄집단에 매수 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우 신중을 가해야 하며, 학술지 내용은 새로운 지식의 발표라는 목표도 있지만 인류 공영을 위한다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연구자 스스로가 발표 내용의 악용될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술지 내용의 제재를 담당하는 기관(?)혹은 사람들에 의한 인위적인 편집에 의해, 과학 발표의 공정성이 훼손될수 있으며, 이는 잘못된 정보의 제공 및, 발표 논문 내용의 검토 및 검증에 많은 영향을 줄수 있다.
- 학술지 내용의 제재를 넘어서 어떤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인류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순수한 과학이라는 미명 하에 인류의 공멸을 초래할 수 도 있는 위험한 실험들이 사전적인 대응 매뉴얼이 갖추어지지 않은 실험실에서 수행되어도 되는 것인지 물어야 한다.
- 학술지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연구하는 현실에서 오픈되지 않았을때 반복되는 연구
- 학술활동의 위축
- 학자/연구자로서의 자율성 회손
- 학자들의 자율성 침해 논란과 반발
- 합리성이 결여된 제제조치가 빈번해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예로, 과학계나 정부기관의 상급자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 해당 학문분야의 편집위원 등에 의한 제재가 아닐 경우 연구에 대한 본질이 왜곡될 수 있음.
- 현재 과학연구 정보가 국경 개념 없이 공유되고 활용될 수 있지만,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류평화적 개념'을 넘어서 '국가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있음.
- 현재 연구자의 능력 또는 성과는 학술지 게재 건수 등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내용의 검열로 연구자 본인이 심혈을 다해 이뤄낸 성과가 게재 되지 안는다면, 연구자들은 연구에 대한 사기가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제재하고자 하는 논문 뿐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 또는 다른 이유로의 범위가 확대 되어 정보 공유가 침해 될 수도 있다.
- 확실하지 않은 연구결과의 악용가능성
- 활발한 정보교류의 억제, 과학 발전의 더딘 진행
- 후임 연구자들이 많은 정보를 얻기 힘들 수도 있다.
- 힘의 논리에 의해 권력을 가지 쪽의 의견대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

IV. 설문지

학술지 검열(?)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수렴

설문목적

얼마 전 미국 정부가 과학학술지에 테러리스트들의 악용 가능성 등을 들어 생물학적 연구결과 일부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와 네이처는 지난 20일 미국 '생물안보를 위한 국가과학자문위원회(NSABB)'가 이들에게 제출된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논문을 일부 삭제 후 출간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수용해 일부 내용이 삭제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학이 가진 사상과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어야 하는 원칙에 입각해 학술지 검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본 설문은 학술지 내용에 대한 제재(출판금지, 내용 삭제/수정) 조치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관련 보도내용

[실험실 괴담: 연구실에서 배양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한다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

[美정부, 조류인플루엔자 제조 방법 논문 연구내용 일부 삭제 요구... 테러리스트에 악용 우려 \(국민일보\)](#)

[美국립보건원 유명 저널 조류독감 연구 수정요구 \(메디칼트리뷴\)](#)

[괴물 바이러스 초비상..악용시 '전세계 재앙' \(MBC 뉴스\)](#)

[美, 네이처, 사이언스 '학술지 검열' 논란 \(KBS 뉴스\)](#)

[테러공포증 美 '과학 검열' 논란 \(서울신문\)](#)

설문진행

- 설문대상자: BRIC 회원
- 설문주최/시행: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 문항 수: 8문항
- 설문기간: 2011년 12월 30일~1월 6일까지

[참여자 정보조사 (Q1~Q4)]

Q1. 미국 생물안보 국가과학자문위원회(NSABB)의 요청이 학술지에 대한 검열이라 생각하십니까?

- 검열이라 생각한다
- 검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판단하기 어렵다

Q2. 미국 생물안보 국가과학자문위원회(NSABB)의 조치가 적절한 요청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적절한 조치였다
- 적절하지 않은 조치였다
- 판단하기 어렵다

Q3. 연구내용이 악용될 사태를 우려해 학술지 내용을 제재 조치(출판금지, 내용 수정/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절대 반대한다
- 매우 제한적이고 신중히 적용된다는 조건하에 찬성한다
- 악용될 우려가 존재한다면 제재조치는 언제라도 필요하다
- 판단하기 어렵다

Q4. 본인의 연구내용이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논문 내용의 제재조치(출판금지, 내용 수정/삭제)를 받는다면 수용하시겠습니까?

- 수용한다
- 수용하기 어렵다

Q5. 만약 학술지 내용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누구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과학계 스스로 주도 (학술지 편집위원 포함)
- 관련 정부기관 주도
- 시민단체 주도
- 과학계+정부기관+시민단체로 구성된 새로운 기관 주도
- 기타

Q6. 이번 논란의 적절성을 떠나 학술지 내용의 제재(혹은 검열)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7. 귀하의 학력은?

- 학사
- 석사
- 박사
- 기타

Q8. 귀하의 직책은?

- 대학생
- 대학원생
- 연구원
- Post Doc./연구교수
- 교수/책임연구원
- 회사원
- 대표이사
- 공무원
- 의료인
- 기타

- 이 상 -